

| 제 3 장 |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오는가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왜 못 돌아오는가?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국군포로들이 못 돌아오는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첫째가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군포로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문제이다.

A)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각:

1. 영토와 통치의 개념 차이: 북한 인민공화국에서는 한반도 전체와 부여도서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로 규정하고²⁷ 따라서 남한도 또한 북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영토 범위를 한반도와 부여도서 전체로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인민공화국의 인민이고 자국에 대한 반란분자들이며(한국전이 내전이라는 주장에 의해) 반역자로서 교전국가간의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 국군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로서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한 반동분자들 또는 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남반도를 해방하려는 데 대해 반역한 무리들로 생각하여 1949년 자기들이 인준한 제네바협정의 제 49항부터 57항까지의 포로들에 대한 강제노동, 또 자국 군대편입 등

27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참조.

이 금지되어있는 항목들은 물론 “포로는 적대행위가 끝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하여야 한다”라는 118조 또한 국군포로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명령 143호 위와 같이 국군포로들은 국제적으로 규정된 “전투행위 중 항복한 자 또는 전시중에 적에게 생포된 자들”이라기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조국의 통일을 방해했다가 귀순한 자들 혹은 조국의 통일 해방전선에 전향 가담한 해방전사 등으로 부름으로써 적과의 전투에서 생포된 자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을 견지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한국전은 ‘내전’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한국전을 내전으로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참전을 ‘미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과 같이 연합해 전투한 대한민국의 국군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조선인민군에 의해 해방된 소위 말하는 ‘해방전사’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을 ‘내전’으로 규정한다면 국군포로는 내전에서 붙잡힌 ‘폭도’들이나 ‘반란군’ 또는 ‘반동분자’ 또는 ‘반역자’가 되는셈이니 ‘포로’에 관한 국제규약인 제네바 협정²⁸을 준수할 의무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1. 국군포로들을 재훈련 후 정규군에 강제 입대시켜 최전선에 투입²⁹ 2. 국군포로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각종 비인도적인 처우 3. 포로교환 때도 수많은 포로들을 억류한 사실 등은 그들이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일반 전쟁포로들의 대우에 관한 국제조약을 성실히 지키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그들의 인식 차이를 말해준다.

28 194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이 제네바 협정 (Geneva Convention)에 서명 가입했음.

29 “U.S. Army in The Korean War” written by Dr. Walter G. Hermes P.142, 그리고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에 의함.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선포된 것이 1956년의 내각명령 143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소위 좌파학자들이 한국전을 ‘내전’(內戰)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구실을 제공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전은 세계가 다 알다시피 이데올로기 전쟁(Ideological Warfare)이었으며 당시 팽창일로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 6·25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은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과 긴밀히 사전에 의논한 결과 일으킨 것으로, 이것이 단순 내전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 세력 대 자유 자본주의 미국을 근간으로 한 UN회원국의 연합세력간에 치른 국제전이였다.

또 한편으로 남북 간의 전쟁을 중소와 유엔군 사이에서 치른 전쟁이라는 뜻으로 대리전(Proxy War)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점은 한국전이 결코 단순한 한반도 내에서의 ‘내전’이 아님을 말하며 이 내전설은 북한의 각종 국제적 범법 행위에 면제부를 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1956년의 내각명령 143호에 의한 국군포로 신분 해소는 북한이 자기들의 국내법상으로는 더 이상 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의 근거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은 항상 “북한 내에는 한 사람의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언명해왔다. 그간 양쪽의 많은 물밑 접촉과 또 수차례의 장관급 회담에서나 2007년 10월 노무현 김정일 간의 최고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쪽에서 (남한) 국군포로 문제만 제기하면 계속되던 회담도 딱 끊기고 북한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소위 “태양처럼 밝드는 위대한” 김일성 수석이 인민공화국 내각명령 143호 발표 후 “북한 내에는 포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그 정권을 세습해온 자손들이 감히 위대한 김일성의 뜻을 뒤집고 지금 새삼 “(국군)포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회담 때 포로 문제만 나오면 일체 함구하고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이다.

3. 김일성과 모택동의 포로 처리에 관한 합의: 북한은 항상 국군포로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포로교환 시 전원 다 송환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 소련 붕괴 이후에 공개된 외교문서(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s)는 북한측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구 소련의 외교문서 P.89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1953년 12월 2일 페도렌코(Nikolai Fedorenko, *UN안보리 구소련대표 역임)가 외무장관 모로토프(Vyacheslav Molotov)에 보낸 각서에 의하면 <13,094명의 이승만 군대(RKA, 국군)와 북한군(KPA)에 편입되어 있는 6,340명 및 내무성 철도청 등에서 일하는 많은 포로들과 42,262명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던 (국군)포로들의 송환처리 문제를 위하여 당시 베이징(북경)에 있던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의논했을 때 “국군포로들을 늦게 보내면 우리의 위반사실의 구실이 되니 보내지 말고, 북쪽지역으로 산개시켜 탈출하거나 중립국 대표들과 접촉하는 일을 방지 하겠다”라는³⁰ 한 기록문서는 북한측이 항상 주장해온 모든 포로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정월 송환됐다는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유럽 우선주의였던 당시 공산세력은 팽창일로여서 2차 세계대전으로 극도로 가난해진 나라들, 특히 피폐해진 동유럽의 각국이 속속 공산진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욱이 새로 설립된 NATO(북대서양 동맹기구)의 병력 증강이 시급한 때라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한반도에만 많은 병력을 붙들어놓을 수도 없는 사정이었다. 또한 미국내에서 날로 번져가는 반전 기운은 한국전의 조속한 휴전(정전)체결에 무한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30 Archives, Armistice Talks in Korea (1951-1953) (Based on Documents from the Russian Foreign Policy Archives) P.89

B) 한국전과 당시의 세계정세(미국내 정치적 상황)

1. 미국 내의 반전 기운: 한국전이 별 진전도 전과도 없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왜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국이란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또 전쟁을 계속해야 하느냐” 하는 반전 기운이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이 반전기운을 이용해 미국 34대 대통령에 입후보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후보는 “당선되면 한국전은 꼭 끝내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극동사령부와 8군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전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극동사령부와 미8군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이 포로 문제가 비록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휴전(정전)협정을 질질 끌고만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또한 여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동유럽이 급속히 공산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한국전을 끝내지 않으면 안되는 압박도 가중된 형편이었다.

2. NATO 설립문제: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한 쓸한 생산시설의 파괴와 살육은 많은 나라들을 빈곤으로 몰아갔고 이 빈곤은 소련의 사회주의 팽창에 큰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고 소련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동유럽 각국은 급속히 공산화되어가고 있었다. 원래 유럽 위주의 미국으로서는 유럽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 급한 터라 하루 빨리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정착 시켜야 한다는 초조감에 정전협정에서 포로교환 문제 등에 다소 허점이 있음을 감지했음에도 빨리 한국전을 끝내려 했다.

한국전 포로송환 과정에서 국제적십자(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가 포로교환 때 북한 내 억류 포로들을 직접 면접하여 본인의 송환 의사를 타진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반대했을 때 이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북한 내에서 포로들을 면접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하고 북한측이 판문점으로 후송해 온 포로들만 면접한 결과가 오늘날 그 많은

포로들이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억류되어 못 돌아오게 된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C) 한국 내에서의 국군포로에 대한 시각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측의 국군포로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 것일까?

1. 정전협상에서 한국군 대표들의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한 노력:

필자는 2005년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강영훈(姜英勳)씨를 만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휴전회담 당시 왜 그토록 많은 국군포로들이 인민군(북한군)에게 붙들려 있었음에도 우리측 대표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별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는 6.25 한국전 당시 국군연락 장교단의 단장을 오래 역임한 분으로서, 한국군과 미국군과의 작전상 여러가지 연락을 맡아하신 분이며 한국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다. 5.16박정희 군사 쿠데타 때는 이를 반대한 이유로 당시 육군 중장에서 강제 예편되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의 USC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 할 때 당시 UCLA에 재학했던 필자와 친분이 있었고 또 학생때 그분의 친구가 나와 친한 분이기도 하여 서로가 잘 아는 사이였다)

필자의 질문에 강 전 국무총리는 다만 “마지막 한국군 측 정전협상단 대표였던 최(덕신) 장군이 좀더 강력하게 한국군의 포로송환 문제에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포로문제가 이러한 결과가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하였다.

필자는 한국전의 휴전문제와 포로송환 문제에 관한 많은 서적과 기록 문들을 읽었고, 그중에서도 한국전의 포로문제를 가장 상세히 서술한 허머스 박사(Dr. Walter G. Hermes)가 쓴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를 수차 반복 정독하였

지만 포로협상 한국측 초대 한국군 대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하여 마지막 한국군 대표 최덕신(崔德信) 장군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측 대표가 국군의 포로송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주장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포로교환 문제는 휴전협상 마지막에 타결된 문제이기에 한국측 대표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본다.)

따라서 강 전 국무총리의 한마디는 정전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포로송환 문제가 가장 치열하게 거론될 때 우리측 대표(최덕신 소장)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받게 되었다.

또 한편 전시전후를 걸쳐 국방부에 오래 근무한 필자의 지인이 국방부 내부에서도 포로 문제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시각을 가진 이유가 포로들은 “군인의 본분인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자기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비겁하게 적에게 투항한 자”들이라는 선입견이 지배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일본군의 진진훈(戰陣訓)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³¹

한국전 발발 당시 고급 장교의 대부분이 일본군 출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은 유행도,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대부분 전멸될 때까지 항전했으며 마지막에는 거의 다 자결로서 끝을 맺었다.

2. 남한 일반 민간인의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관심:

일반 민간인들은 고 조창호 중위가 한국전에서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 되었다가 1994년 목숨을 걸고 탈출, “북한에 많은 국군포로들이 붙잡혀 있다”라고 처음 그 진상을 폭로할 때까지 국군포로들이 강제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31 일본의 진진훈에는 “군인은 적에게 생포가 되는 치욕 보다 자결로서 그 명예를 지키라”라는 구절이 있음.

필자 역시 한국전에 직접 참전하였지만 포로문제는 포로교환 조약과 정전 협정에 의하여 정전이 성립되자 60일 이내에 포로교환이 잘 되어 돌아 오고 싶은 자들은 다 돌아왔고 또 가고 싶은 자는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 많은 포로들이 강제로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 필자 역시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 곧 명예제대했고, 바로 미국 유학을 왔기 때문에 포로문제에는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었지만 조창호 중위의 탈북을 계기로 북한에 많은 포로들이 억류되어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고 조창호 중위에 의하면 김영삼 집권기인 1994년 북한에서 처음으로 탈북해 왔을 때는 굉장한 환영을 받았고 또 정부의 후원 하에 포로문제에 대해 여러 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강연도 했고, KBS 등을 통하여 북한에서의 어려웠던 포로생활 등을 기록영화로 만들어 방영도 하고 일 반극장에서³² 상영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1997년 이후에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포로문제 보도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지양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조창호씨에 대해서도 일체 강연 등을 금지시켰으며 외부출입을 제한하여 연금 상태로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³³

그 뒤 필자가 관여하는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2004년 미국에서 결성되어 2005년부터 미 국회를 비롯한 정계에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각종 포럼, 세미나 등의 활동과 동시에 또한 한국정계, 특히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씨를 비롯하여 김문수씨, 황진하씨, 박진씨 등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호응하여 한국 국회 내에서도, 또 각 신문사 특히 세계

32 고 조창호중위의 북한에서의 포로생활과 탈북에 관한 Video “돌아온 망자”와 KBS방송사 제작의 “조창호 국군포로 탈출기”가 있음. 원하시는 분은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미주본부에서 무료로 DVD를 보내드리도록함. 전화번호 (323)931-7311 또는 (714)717-1121 또는

이메일 chungpow@hotmail.com 또는 tombyun@yahoo.com 으로 연락바람. 단 송료는 본인부담.

33 이 이야기는 고 조창호 중위가 2005년 4월에 필자와 같이 미 국회 의사당에서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포럼 (forum)에 참가차 같이 가면서 한 이야기며 그뒤에도 함께 다니면서 수차례 이 이야기를 되풀이 하였음.

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각종 일간지들도 포로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일반 국민들도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듯 했다.

그러나 정전 후 이미 40여년이 지나 국민들의 뇌리에서 차차 포로문제가 사라지려는 무렵 김대중의 좌파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여당인 민주당과 그 뒤를 이은 열린우리당의 집권세력은 국군포로 문제 제기는 햇볕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마당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덮어두려고 애썼다.

또한 이념적 면에서 주사파를 비롯, 같은 민족끼리를 내걸고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우리 민족의 통일전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는 종북파들의 발호가 그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

그 뒤를 이은 좌파정권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반미감정까지 노출시킴으로써 한국전에서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의 충성심은 완전히 퇴색 되었다.

그러한 사조를 대표한 자 중에 강정구 교수를 꼽을 수 있다.

강정구 교수는 “한국전은 한반도(적화)의 통일전쟁이었으며 이를 방해한 자는 미국”이라는 미국의 한국통일 방해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에 대항하여 미국과 함께 북한의 침공을 막은 대한민국 국군은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한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었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러한 시각의 소유자들이 발호하는 남한에서 국군포로들에 대한 편견은 북한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군포로가 조국의 방위를 위하여 희생된 자로 인식될 리가 없는 것이다.

한편 한국전에서 실제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자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높은 교육도 받지 못한 남한사회의 어려운 계층(소위 힘없고 뺨 없는 자들?)이 많았다.

일제 식민지의 착취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극도의 가난에 시달렸고 북위 38도선 이북은 소련의 뒷받침 아래 이미 완전히 공산화되었다. 남한 안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한 미 군정의 정책은 민주주의를 체험해본 적이 없는 남한사회를 더욱 더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리게 했다.

여기에 좌우간 이념 충돌은 신생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법질서가 자리도 잡기 전에 6.25가 발발함으로써 공정하고도 강력한 법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환경에서 고위 고관이나 부유층의 자식들은 거의 다 돈과 권력을 이용, 병역을 기피했으며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배계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한에서 억류 국군포로 문제가 피안의 불구경처럼 심각하게 거론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간주된다.

이것은 오늘날 10대 재벌 총수들 중(현대를 제외하고) 그 어느 재벌의 자식도 한국전에 참전했거나 군복무한 자가 없다는 사실과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드러난 바와 같이 고위공직 내정자의 많은 분들이 군복무를 기피한 자들이었다는 사실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와 그릇된 이념에 물든 자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서 국가 방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영어의 몸이 된 국군포로의 송환 문제가 거국적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참으로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아닌가 생각 된다.

D) 공산측은 더 많은 국군포로들을 억류하려했나

그러면 왜 공산측은 그토록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국군포로들을 불법적으로 억류하려 했을까?

ㄱ) 첫째는 가능한 최대한의 포로들을 잡아두었다가 전시 중에 파괴된 모든 항만, 도로, 교량 등의 보수와 지하자원의 광물과 석탄 채굴 등의 강제노동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한국전에서 미군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은 북한의 제반 군사시설은 물론 철도, 도로, 항만 등 모든 군수품 수송 수단의 철저한 파괴를 가져왔고, 전투에 절대 필요한 군수물자와 병력 이동이 거의 차단되어 오직 야간에만 인력으로 수송하는 형국이었으므로 파괴된 시설의 복구는 매우 화급한 문제였다. 이러한 복구사업과 석탄 및 지하자원 채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을 억류 국군포로를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1994년 탈북한 고 조창호 중위와 그 후 탈출해온 국군포로들

도 강압에 의해 인민군에 입대한 자 외에는 전부 강제노동에 종사했다고 증언하였다.³⁴

이와 같이 포로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거나 자기 군에 편입하는 것은 제네바 협정에 명백히 위반됨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공산측은 구 소련의 외교문서(Documents of the Russian Foreign Ministry Archives)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탈린도 모택동도 포로는 가능한 많이 잡아두는 것이 좋다는 권유의 구절에서와 같이 가능한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은 포로들을 잡아두려고 계락을 꾸몄다.

ㄴ) 북한의 정규 인민군은 전쟁 중 미국의 육 해 공군의 가공할 화력에 많은 사상자를 내어 지상군 병력이 극히 부족했고, 그 보충으로 억류 포로들을 사용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ㄷ) 북한군은 한국전에서 지상군의 대부분을 잃었기에 또한 북한인구의 남녀 비율에서 여자가 엄청나게 많아 사회적 불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1956년 모든 억류 포로들에게 공민증(시민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강제 결혼을 시킨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 (탈북 국군포로들의 증언에서)

특히 UN군측은 북측이 많은 포로들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억류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휴전감시위원회 산하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게 북한에 입국하여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을 직접 접견하고 본인의 의사를 타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이상조 북한 인민군 부대표가 “국제적십자 위원들이 입북하여 포로들을 직접 면접, 본인의 송환여부 의사를 타진한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사실은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탐사하기 위한 목적의 간첩행위”라며 “비록 정전협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ICRC의 입북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해 북한에 억류되어있던 포로들의 송환 의사 여부를 직접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34 별첨 B의 탈북국군포로들의 증언 참조. *** 탈북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가족들을 이북에 두고 있다.

못하였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포로들을 재교육시켜 인민군에 재입대시킨 것을 비롯, 전 포로들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산 등지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던 차라 이 모든 것이 제네바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들을 입북시켜 직접 포로 당사자들과 면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UN군 포로 92,070명 중에서 포로교환으로 돌아온 13,444명(이 중 한국군포로 8,321명)을 제외한 남은 78,636명(이들 대부분이 한국군 임)은 송환을 원하는 자만 송환한다는 원칙을 거꾸로 이용, 이를 구실삼아 돌려 보내지 않았다. 그것이 (국군)포로들이 현재까지도 이북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한편 포로문제로 정전협상이 담보상태에 놓여있던 중 정전협상의 진행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이 1953년 3월의 스탈린 사망으로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구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 전선에서 많은 독일 포로들을 석방하지 않고 폴란드에 집결시켰다가 종전 직후 이들을 오래토록 자기들의 전후 시설복구에 동원하였다가 나중에 돌려보냈다. 또한 극동전선에서 일본군이 항복하자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여 시베리아 개발에 사역시켰다가 5년이 지난 뒤에야 생존자들을 돌려보낸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 같은 것에 유의하지 않았던 나라였다.

여하튼 한국전의 경우 북한이 많은 포로를 억류한 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후복구를 위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함에 어떻게든 포로들을 잡아 두어야할 필요성에서 때마침 포로교환 원칙에서 UN(미국)측의 인도주의에 입각한 자기 의사에 따라 송환한다는(Voluntary Repatriation)의 조항을 역으로 심분 활용한 것이다.

물론 UN군측에서 휴전감시위원회(인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하의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Red Cross... ICRC)가 남한에서와 같이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포로 각자들을 만나 그

의사를 타진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토록 많은 포로들이 자기의 의사와는 반대로 강제 억류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진 포로교환의 숫자는 어떠한가? 다음은 남북간에 교환된 송환포로의 실제 숫자이다.³⁵

A) 공산측에 억류된 전 UN군(한국군 포함)의 총수 ...	92,070명 ³⁶
B) UN군(남쪽)으로 돌아온 포로 총수	13,444명 ³⁷
(돌아온 포로중 USA미군	3,746명)
(한국군(ROK)	8,321명)
(영국군 및 기타국	1,377명)

.....

B) 공산군(북측)으로 돌아간 포로 총수	82,493명
(인민군	75,823명)
(중공군	6,670명)

*** 공산측이 정전협정 직전에 제출한 북측의 관리하에 있다는
 (UN군 포로 총수

(UN군 포로 총수	92,070명) ³⁸
(이중 송환된 총수	13,444명)
억류된 포로 총수(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로) ..	<u>78,636명</u>
(이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군 출신임)	

*** 여기에서 억류된 78,636명 전원이 과연 자의에 의해 북한 잔류를 원했는지가 필자의 조사 초점이었다.

이를 위해 고 조창호씨를 비롯해 그 뒤 탈북해온 많은 국군포로들을 만나 “왜 포로송환시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몇십년이 지난 지금

35 Dr. Hermes' "US Army In Korean War... Appendix B

36 Monument of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in DC

37 Monument of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Washington DC

38 Monument of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Washington DC

목숨을 걸고 탈출해왔느냐” “그동안 북한에 잔류 중에는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등에 대해 깊이 캐물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자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국군포로들이 오늘날까지 못 돌아오는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요약하면, 첫째는 포로교환 조건인 ‘자발적인 의사에 맡긴다’는 Voluntary Repatriation이 적에게 역이용당한 것이고, 둘째는 UN군의 주축인 미국의 국내외 사정이 적의 허구를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고, 셋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 포로문제를 피안의 불 보듯 했다는 점, 넷째로 공산측은 처음부터 국군포로는 가능한 많이 잡아두겠다는 심산이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